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83.25	↑ 코스닥	1148.40
	(-26.70)		(+11.57)
↑ 금리 (연이자율)	3.271	↑ 환율 (원/달러)	1477.30
	(+0.018)		(+10.80)



글로벌 AI 동맹 속도
엔비디아·AMD 등
협력 확대
04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안전자산 선호 속 환율 변동 ▲금융시장과 자금시장 변수 등 세가지 측면에서 짚어본다. <편집자주>

에너지 공급망 ‘흔들’ 질어진 인플레이션 그림자

중동 사태와 경제 리스크

① 전쟁이 밀어 올린 유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들쭉이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재점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실시간 유가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석유공사 오픈넷(Opinet)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각각 87.25달러, 91.98 달러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2월27일) WTI가 67.02, 브렌트유가 72.48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30%, 27% 급등했다. 두바이유는 같은 기간 배럴당 71.24달러→119.55달러로 68%나 상승했다. 중동 전쟁 여파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상승 압력 기준금리 인하 시점 늦춰지거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제기 채권시장은 이미 금리인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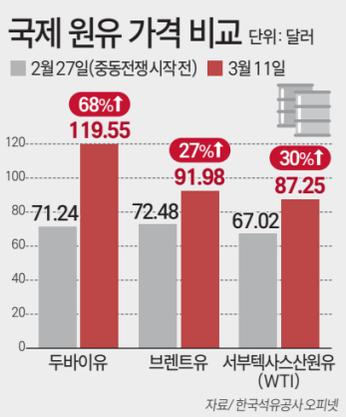
◆ 중동전쟁 후폭풍… ‘물가 급등’

이처럼 증가한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유는 전력·물류·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의 핵심 원자재인 만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생산비와 운송비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1973년 4차 중동전쟁 당시 석유 금수조치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경제는 ‘오일쇼크’를 겪었고 물가가 급등했다. 당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72년 3.4%에서 1973년 8.7%, 1974년에는 12.3%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기준 118.40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 상승했다. 생산자 물가도 지난해 10월 1.90%에서 11월 2.20%로 상승한 뒤 지난 1월까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통상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 기준금리 2.5%인데 국제 3년물 3.2%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거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아진 이후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기준 3.25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2.50%)를 감안하면 시장이 이미 2회(50bp=0.01%포인트) 이상의 추가금리 인상가능성을 선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과거 고유가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 1월 4.5%이었던 기준금리를 그해 7월과 8월 각각 4.75%, 5.00%로 올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7년 1월 1.7%였지만 ▲2월 2.2% ▲5월 2.3% ▲6월 2.5% ▲7월 2.5%로 상승한 영향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압력이 커졌던 시기에도 금리를 인상했다. 2022년 2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80달러였지만 3월엔 110달러 6월엔 113달러까지 뛰었다. 당시 물가상승률도 시차를 두고 반영돼 ▲2월 3.8% ▲3월 4.2% ▲4월 4.8% ▲5월 5.3% ▲6월 6.0% ▲7월 6.3%까지 올랐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美 무역법 301조, 기존 관세수준 유지 협의”

여한구 산업통상교섭본부장 “철강 등 232조에서 이미 관세 부과 제조업 공급과잉 문제 점검하는 것”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나 통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인만큼 추가적인 통상 압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백



브리핑에서 “이번 301조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이 미국 상위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와 함께 각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는 대법원의 관세 관련 위헌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를 위한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며 “이번 조사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사와 기존 품목별 관세 조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4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빵·케이크 가격 인하

12일 서울 시내 푸레쥬르(왼쪽)와 파리바게뜨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CJ푸드빌 푸레쥬르는 이날부터 민생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빵과 케이크 등 주요 제품 17종 대상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했다. 파리바게뜨는 13일부터 주요 제품 11종의 가격을 인하한다. /뉴스1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재직·퇴직자 972명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 확정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재직·퇴직자 강모씨 등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4면>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고려하더라도, 근로 제공과의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 972명은 한화오션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 퇴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으로, 회사를 통해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정산받았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한화오션이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성과배분 상여금’ 및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를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사측)가 근속 1년마다 30일분이 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해,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퇴직자들이 제기했던 퇴직금 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취지의 소송인 셈이다.

1·2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특성상 사측이 사업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은 한화오션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메트로 한줄뉴스



▲李 公소취소 거래설…與 “강력대응” vs 野 “탄핵감, 특검해야” /사진 뉴스1
▲李대통령 “靑 직원들 업무 과중…필요하면 정원 ↑”

▲전재수, 정청래 면담 후 부산시장 출마 공식화…본인 지역구엔 하정우 언급
▲“사기대출” 당선후회형 확정 받은 양문석…“헌재 판단 받아볼 것”

▲국힘 최고위에서 김어준 동영상 틈 김민수…장동혁·송언석 “특검해야”
▲“경기도지사 출사표” 추미애 “중도층 경쟁력? 걱정 안 해”